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8. 11. 14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상하수도본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상하수도본부장	강창석	750-7700
		하수도부장	이학승	750-794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제주특별자치도, “획기적 하수처리 종합 관리체계 만들 것”

행정부지사 총괄 ‘하수관리 종합기획단’, 4대 분야 중심 종합대응 추진

4개 관련 분야 예산에 지방비 170억원을 우선 반영해 총력

- 제주특별자치도가 ‘맞춤형 종합 하수관리 체계’ 를 구축하고 “하수처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” 고 선언했다.
-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‘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’ 을 발표했다.
 -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“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‘시설관리공단’ 을 추진하기로 했다” 고 밝혔다.
 - 아울러 “상하수도 원단위(상하수도 1일 사용(소비)량) 적용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하수처리장·관리인력 확충 등 맞춤형 관리체계, 지역주민과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하수처리 종합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키로 했다” 고 강조했다.
 -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내년 4개 관련 분야 예산에 지방비 17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.
-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상하수도 본부장 외 9개 실국이 단장을 맡는 ‘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리

종합기획단' 을 설치하고,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.

○ 첫째, 상·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통일 적용과 년말 물 소비량 등을 감안한 원단위 보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.

- 향후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은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적용하고, 개별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한다.
- 하수처리계획 협의 시에는 방류계획(계절별, 시간대별)과 시설물(중수도 등)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 협의 이력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한다.
-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건축물 용도,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설정을 별도 검토하고 처리장 증설 준공시기에 맞게 협의한다.
-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시설 확대(물 사용량 30%이상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)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.
-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방류관 개선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간다.

○ 둘째, 현재의 시설용량 240천톤(8개 처리장)을 2025년 428천톤 수준까지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.

- 제주(도두)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 중 시설개량(13만톤)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3,887억원의 50%(국비 1,943억원)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중앙절충을 강화한다.
-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,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투자한다.

○ 셋째,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인력 관리·운영해 나간다.

- 관리대상 하수처리시설(하수처리장, 펌프장, 차집관로 등) 과다,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
- 수처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,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관리인력 증원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.
- 제주(도두)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정상화 및 조기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시설을 완전 지하화 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.

○ 넷째,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한다.

- 처리장 증설과정에서 증설반대와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, 행정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“중재조정 자문단” 등을 설치하여 주민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다.

○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“하수처리 안정화시점까지 하수관리 종합 관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히면서 “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